

2023년 상반기 고충민원 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공개문



경 상 남 도
(감 사 위 원 회)

< 목 차 >

1.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부적정 및 행동강령 위반	1
2. 공유재산 관리 및 관리위탁 업무 등 부당처리	10
3.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조치 업무 부당처리	19
4. 부동산 교란행위 공익신고 처리 부적정	25
5. 공작물 축조 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등 처리 부적정	29
6.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관련 민원처리 부적정	34
7. 민원 발생한 불법 개발행위 등 처리 부적정	40
8. 산림 무단벌채 고발사건 지연 처리	47
9. OO천 호안 정비공사 부적정	50
10. 고충민원 등 처리기한 미준수(OO시)	53
11. 고충민원 등 처리기한 미준수(OO군)	56
12. 고충민원 등 처리기한 미준수(OO군)	60
13. 고충민원 등 처리기한 미준수(OO군)	64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중징계·훈계 요구 및 주의

제 목 000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부적정 및 행동강령 위반
소 관 기 관 00군(0000과)
조 치 기 관 00군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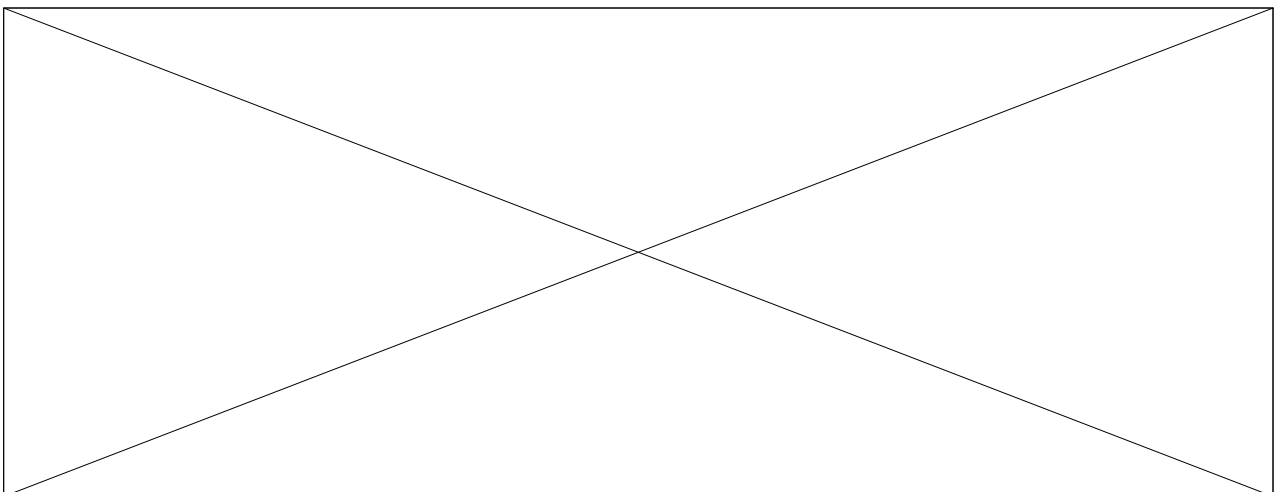
1. 현황(업무개요)

00군 0000과는 [표 1]과 같이 2019. 9. 30.부터 2021. 6. 15.까지 1,550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000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였고, 2020. 5월 [그림 1]과 같이 도로노선을 조정하여 변경 추진 하였다.

[표 1] 000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현황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백만 원)				공사기간	비고	
			총사업비	도급액	관급자재대	보상금 등			
OOO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OO군 백전면 OO리 일원	도로확포장 L=0.8km	당 초	1,403	773	290	340	'19. 9. 30. ~'21. 6. 15.	
			변 경	1,550	793	324	433		
			증 액	147	20	34	93		

[그림 1] 도로노선 조정



2. 000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공사시행 전반을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선정 등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OO군 OOOO과에서는 ‘000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에 있어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사에 착수한 후에는 공사진행 단계별로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도로노선 조정 및 사토장 선정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OO군 OOOO과에서는 2019년 9월 ‘000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발주한 이후, 2020년 1월 도로중단 구배가 급하다는 사유로 도로노선 조정 결정을 하고 현장조사를 재 실시하여 2020년 5월 도로노선을 조정하면서, 횡배수관 및 사토장 설치 등 다음과 같이 공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도로노선 조정으로 횡배수관 설치 또한 재수립 필요함에 따라 실시설계 당시 도로 횡배수관 설치계획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로에 배수관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도로 횡배수관 설치 계획 재수립 시 현장여건을 고려한 수리검토

등 면밀한 배수계획을 통하여 설치되어야 하나, [그림 2]와 같이 아무런 대안 없이 횡배수관이 위치한 부지를 분할하여 3필지, 5,369m² 면적의 토지를 53,680천원의 보상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과다하게 매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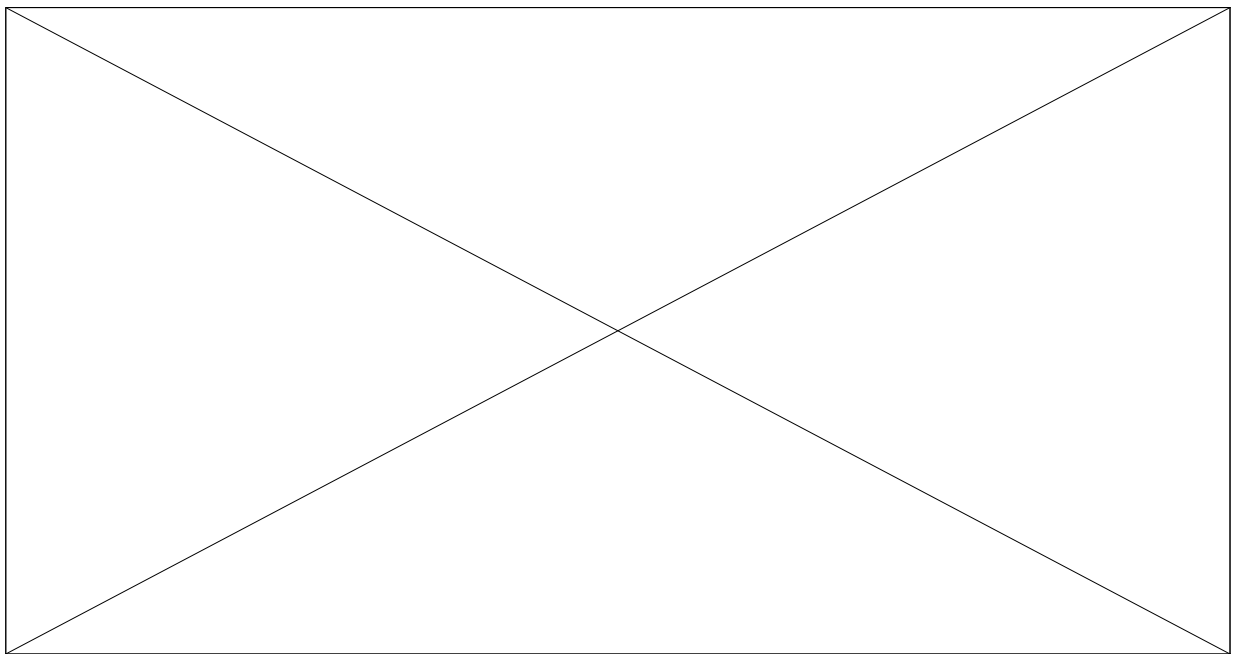
[그림 2] 'OO면 OO리 산00-2번지' 일원 토지분할 현황

□ 분할된 토지현황

구분	분할 지번	면적(m ²)	분할된 토지의 현황
편입 토지		5,368	
①	산00-11	1,794	②를 제외한 ①,③필지는 급경사지 형태로 활용 가치가 없는 토지 ⇒ 횡배수관 설치목적으로 매입 : 53,680천원 (단가 : m ² 당 10,000원)
②	산00-13	112	
③	산00-14	3,462	
미편입 토지		4,472	
④	산00-2	849	당초 평지 형태로 활용 가치가 있는 토지
⑤	산00-12	2,490	
⑥	산00-15	1,133	당초 경사지이나, 사토장 공사 정지작업 등으로 활용가치 상승

※ 당초 면적 : 9,840m²(OO면 OO리 산00-2번지)

□ 토지 현황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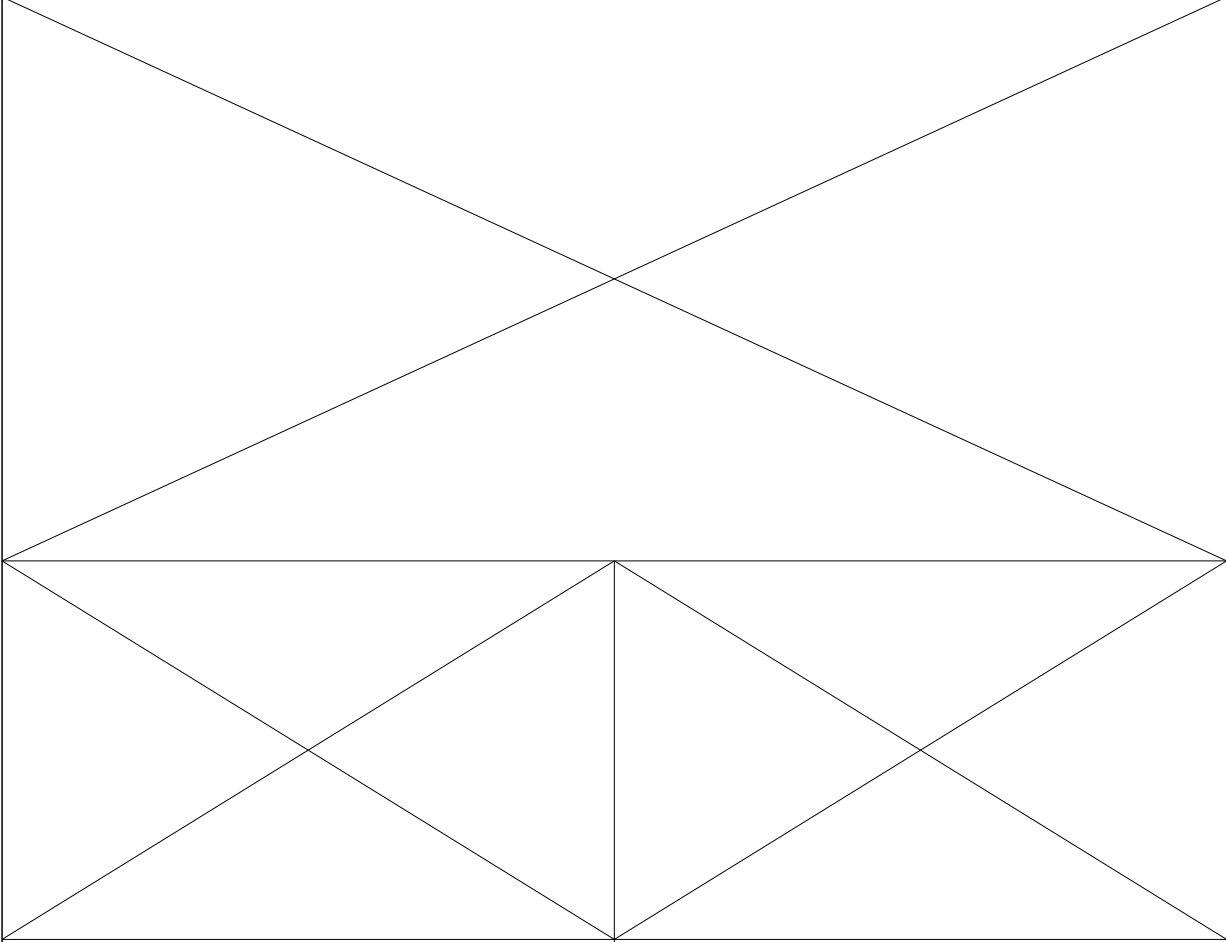


[출처 : OO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사토장 선정에 있어 상기 도로 횡배수관 편입부지를 활용함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개인 사유지로 남은 편입되지 않은 'OO면 OO리 산00-15번지(면적 1,133m²)'를 사토장으로 선정하였고, [그림 3]과 같이 하천 호안 전석쌓기 등 불필요한 추가 사업비 68,027천원을 투입하였다.

[그림 3] 사토장 부지조성 공사 및 추가 사업비 현황

□ 사토장 공사 현황

		① 하천 호안 전석쌓기(설계 반영)	② 사토장 조경석 쌓기(설계 미반영)

□ 사토장 부지조성 추가 사업비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	사업비(천 원)			비고
			계	호안 전석쌓기	횡배수관 변경	
OO면 OO리 산00-15	임야	1,133	68,027	21,246	46,781	

[출처 : OO군 제출자료 재구성]

결국 OO군 OOOO과에서는 도로노선 조정에 따른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횡배수관 설치를 위해 사유지를 과도하게 매입하고 사토장을 부적정하게 선정하여 호안 전석쌓기 등 불필요한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2019년 9월 공사 착공 이후 2020년 5월 도로노선 조정 실정보고 승인까지 OO 군 OOOO과의 작업지시로 7개월 가량 사업의 지연되었음에도, 2020년 10월 시 공업체의 부진공정 만회대책¹⁾ 수립 이행을 통보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등 ‘OOO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3. 실무책임자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르면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따르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서는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바목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 정의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조(특혜의 배제)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1) 부진공정 만회대책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4조에 따르면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었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 부진사유 분석 등 만회대책을 수립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같은 규정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 제3호에 따라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OO군 OOOO과 OO담당 OOO은 ‘OOO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이하 ‘실무책임자’라 한다)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① 실무책임자와 혈연관계인 소유자의 토지를 과다하게 매입

그러나 실무책임자는 자신이 해당직위에 부임한 2020년 1월 ‘OOO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기존의 도로노선을 조정하면서, 도로 횡배수관 설치 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편입토지를 최소화하여 설치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비교·검토 대안 없이 [표 2]와 같이 본인의 혈연관계에 있는 소유자²⁾의 활용가치가 있는 평지만 남겨두고 상대적으로 경사가 급한 활용가치가 없는 부지 2필지, 5,256㎡를 과다하게 편입 결정하여 토지 보상금 52,560천 원을 지급하였다.

2) 실무책임자 OOO과 토지소유자 OOO은 6촌의 친척관계로 확인됨

[표 2] 000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과다 매입현황

위 치	지 번	면적(m ²)	보상금(천 원)			비 고
			단가	금액	소유자	
00군 00면 00리	계	5,256	10	52,560	00군	
	산00-11	1,794	10	17,940		
	산00-14	3,462	10	34,620		

[출처 : 00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러한 실무책임자 행위는 혈연관계에 있는 소유자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주고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및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 위배된다.

② 개인사유지 사토장의 부지정비 부적정

또한 도로 횡배수관 편입 토지를 이용한 사토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혈연관계에 있는 사유지를 사토장으로 결정하고, 작업여건이 곤란하고 불필요한 하천 호안 전석쌓기 및 인근 도로 횡배수관 설치계획을 변경하여 [그림 3]과 같이 추가 사업비 68,027천 원을 투입함에 따라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으며,

사토장 내 도로법면은 당초 토공작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대가 없이 실무책임자가 시공업체에 지시하여 ‘조경석 쌓기 A=75m²(사업비 8백만 원 정도)’로 시공되었고, 최종 설계변경에 반영되지 않은 채 준공처리 되었다.

혈연관계 소유자의 사유지인 사토장에 하천 호안쌓기 등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인 실무책임자의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및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 위배되며,

자신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인 시공업체에 조경석 쌓기 작업 지시를 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 금지)에 위배된다.

③ 사토장 부지 매입을 통한 사익 추구

실무책임자의 결정으로 2020년 5월 사토장 지정에 따라 호안 전석쌓기 등 불

필요한 사업비를 과다하게 투입하여 토지 이용가치를 높인 다음 2021년 6월 공사가 준공처리 되었고,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22. 4. 11. 실무책임자의 배우자인 000은 사토장 조성 부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등기 이전을 위해 [별지 1] 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³⁾를 00군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실무책임자(배우자)의 행위는 비록 2022. 4. 14. 계약 해제되었다고 하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당초 사토장 부지의 이용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및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위배된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00군은 해당 사안에 있어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실무책임자는 000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미준수, 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공사 설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하여야 하나 일부항목에 대하여는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을 인정하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고 하며,

실시설계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되지 않아 노선이 시설기준에도 부적절하게 계획 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그 누가 되었던 동일하게 처리 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도로중단 계획에 의한 도로노선 조정이 필요하였다면 전체 중단계획을 바탕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해당 혈연관계의 소유자가 있는 곳만 노선 조정한 것에 있어서는 받아 들일 수 없으며, 배수관 재정비가 필요하였다면 수리검토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설계 검토가 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검토·대안 없이 혈연 관계 소유자의 토지에 있어 평지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는 남겨두고, 상대적으로 토지이용 가치가 떨어진 경사지는 분할하여 전체 매입을 하였다.

그리고 사토장 선정에 있어 현장 내 과다 매입한 부지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2022. 4. 11. 신고서를 제출 하였으나, 2022. 4. 14. 합의해제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제출하여 계약해제된 것으로 확인됨

하나 혈연관계 소유자의 개인 사유지를 선정하고, 사토지 인근 횡배수관 등 하상
쇄굴 및 시설물 유실 우려와 하천 하류 수충부 정비를 위해 전석으로 정비하여
추가 사업비 68,027천 원이 투입된 것을 볼 때 결코 예산 절감 한 것이 아니라 본
사토장의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무책임자는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미 혈연 관계 소유자의
사토지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도록 약속하여 부지조성 하였고,

당시 실무책임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재산상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해당 토지를 사토지로 활용하기 위해 분할
측량부터 구역을 정해 놓았으며 추가 사업비를 투입하여 충분히 토지 가치를 높인
후 단지 민원해결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조치할 사항 00군수는

- ① 000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당시 실무책임자 00군 0000과 지방0000 000(현 지방00000,
00군 0000과)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중징계’ 처분하고, 000 농어
촌도로 확포장공사 실무담당자와 실무책임자의 업무추진에 있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감독책임자 00군 0000과 지방0000 000(현 00군 00과)과
000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부적정하게 처리 한 실무담당자 00군
0000과 지방00000 000(현 00군 00000)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
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중징계, 훈계)
-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
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경징계·훈계·주의 요구 및 기관경고·통보

제 목 공유재산 관리 및 관리위탁 업무 등 부당처리

소 관 기 관 OO군(OOOO과, OOOO과, OOOO과)

조 치 기 관 OO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OO군 농업기술센터 OOOO과(위·수탁 계약 당시 OOOO과)는 ‘OOOO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OOOOO센터’, ‘OOOOO’, ‘OOOOOOOOOOO’, ‘OOOO OO’ 등의 재산관리관으로서 이들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행정재산 중 [표 1]과 같이 조성된 ‘OOOOO’에서 운영된 불법 야영장 민원 신고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업무처리를 하였다.

[표 1] ‘OOOOO’ 조성사업

사업비	1,193백만 원	사업기간	2013. 12. 6.~2015. 10. 13.
최초결정일	OO군고시 제0000-00호(2013. 00. 00.) ※ 변경고시 제0000-00호(2019. 0. 0.)		
위치/면적	OO군 OO면 OO리 283번지 일원(보전관리지역, 기타공원시설) / 19,958m ²		
주요시설	다목적 운동장, 식수대, 샤워장, 수변전망대, 주차장 등		

[표 2] ‘OOOOOOOOO’(수영장 포함) 불법 운영 관련 민원 및 업무처리 내용

연 번	일 자	관련사건 및 업무처리 내용	비고
1	2019. 6. 24.	‘OO OOOOOO’ ‘OOOOO’ 내 수영장업 신고	OOOO과
2	2020. 10. 20.	‘OOOO 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체결 - 시설/기간 : ‘OOOOO’ / ‘20. 11. 2.~23. 1. 1.	OOOO과

3	2021. 이하 일자 미상	민원인 불법 야영장, 수영장 운영 민원 제기	OOOO과
4	2021. 9. 17.	관광진흥법 위반사항(미등록 야영장) 알림	OOOO과
5	2021. 9. 24.	OOOO 위·수탁 협약사항 준수 통보(1차)	OOOO과
6	2021. 9. 29.	국민신문고 무허가 캠핑장 및 수영장 신고 - 조치 없이 계속 영업하여 재신고	OOOO과
7	2021. 9. 29.	관광진흥법 위반사항(미등록 야영장) 2차 알림	OOOO과
8	2021. 10. 6.	언론보도 : OO 농촌개발지 위탁 영농법인이 불법 건축·무허가 야영장 운영	연합뉴스
9	2021. 10. 12.	관광진흥법 위반(미등록 야영장) 고발	OOOO과
10	2021. 10. 13.	언론보도 : OO군 OOOOOOOOO '뒤늦은 행정초지' 논란	뉴스경남
11	2021. 10. 13.	OOOOOOOOO 위반 사항 알림 - 공유재산법 위반, 개발행위 위반(OOOO과) - 불법건축물(OOOO과), 농지 불법 전용(OOO과)	OOOO과
12	2021. 11. 5.	OOOO 위·수탁 관리운영 시설 원상복구 요청(2차)	OOOO과
13	2022. 1. 24.	OOOO 위·수탁 관리운영 시설 원상복구 요청(3차)	OOOO과
14	2022. 6. 25.	'OOOOO' 내 수영장업 폐업신고	OOOO과
15	2022. 8. 2.	OOOO OOOOO 운영 관련 시정조치 안내 - 미신고 수영장 시설 운영 확인 후 시정 조치 공문 시행	OOOO과

[출처 : OO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OO군 OOOO과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표 3]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신고 수리 현황

업종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신고수리 일자	비고
수영장업	OOOOOO	OO군 OO면 OOOOOO 862, OOOOO센터	OOO (OOOO. O. O.)	OOOO. O. OO.	실제 수영장 신고·설치 장소 'OO군 OO면 OO리 OOO번지, OOOOO'

2. 무단 원상 변경된 공유재산의 관리수탁 계약 업무 부당처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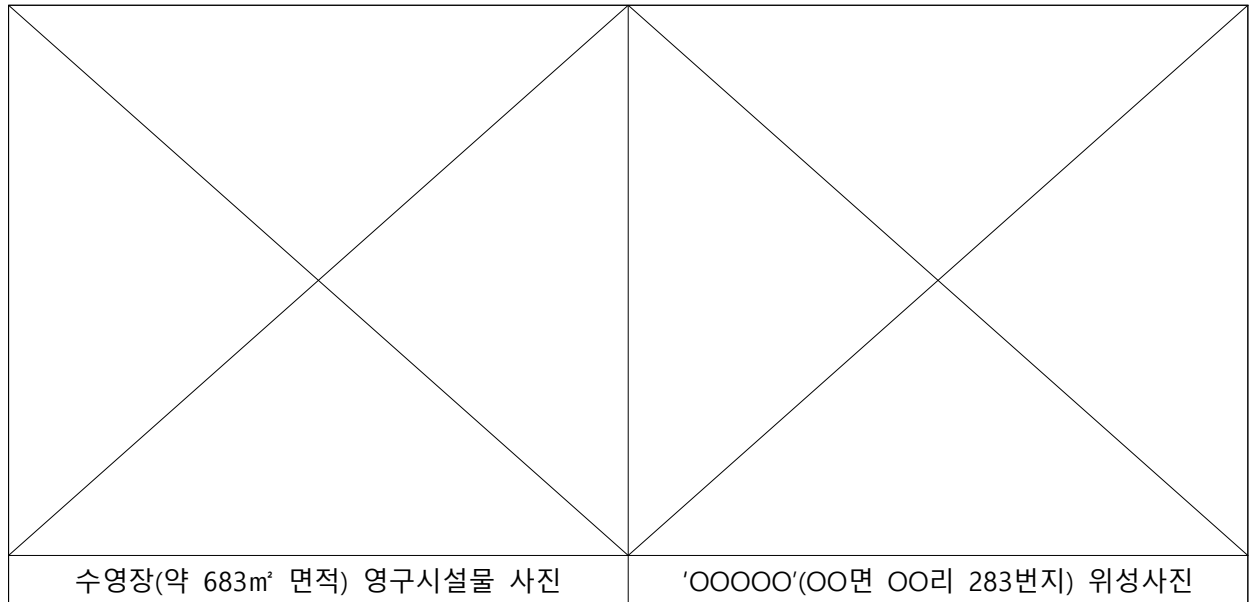
따라서 00군 0000과(당시 0000과)는 ‘00000’ 수변공원의 재산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에 무단으로 영구시설물이 설치되었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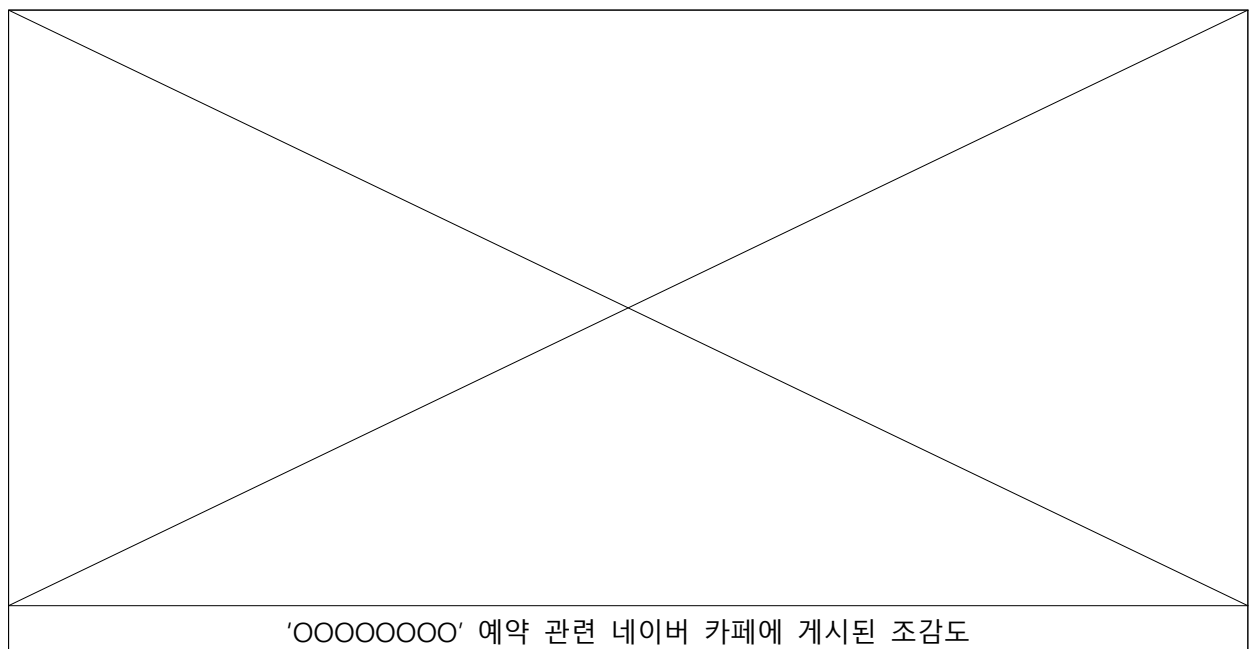
그러나 00군 0000과(당시 0000과)에서는 ‘000000 영농조합법인’(대표자 000)(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이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이 2018. 7. 경 00면 00리 000번지 ‘00000’ 수변공원에 약 683㎡ 면적의 수영장을 철근

콘크리트조로 축조하고 약 1,062㎡ 면적을 파쇄석 포장한 것을 비롯하여 수영장
장 유기시설,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등 수영장 및 야영장을 운영하는데 필
요한 시설을 갖추어 공유재산의 원상을 무단으로 변경하였고, 관련 인·허가 없이
수영장과 야영장 운영하며 수익사업을 하였음에도,

[그림 1] '00000' 공유재산 무단 원상변경 사진



[그림 2] 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수익한 야영장 및 수영장 조감도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2020. 10. 20. [표
3]과 같이 2020. 11. 2.부터 2023. 1. 1.까지 2년간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

른 관리위탁을 결정하여 이 사건 법인이 부당하게 사용·수익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법인과 'OOOOO센터'에 대한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하면서 「OO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서 정한 서류와 OO군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를 절차 없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OOOO 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상 위·수탁 내역 ('20. 10. 20. 체결)

수탁자	시설명	협약기간	소재지	비고
OOOOOO 영농조합법인	OOOOO센터	'21. 1. 2.~'23. 1. 1. 3회차 (2012.~)	OO군 OO면 OOOOO 000	부지 : 12,659m ² 건축 : 695.42m ²
	OOOOO	'20. 11. 2.~'23. 1. 1. 신규	OO군 OO면 OO리 000번지	부지 : 19,958m ² (OO수변공원)

[출처 : OO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공유재산 무단 원상변경 원상복구 지연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OO군 OOOO과(당시 OOOO과)는 2021. 2021. 9. 초순경 'OOOOO' 수변 공원에 무단으로 수영장 등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00군 0000과(당시 0000과)는 ‘00000’ 수변공원의 재산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에 무단으로 영구시설물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00군 0000과(당시 0000과)에서는 2021. 9. 초순경 민원 제기에 따라 현장을 점검하고 공유재산에 무단으로 수영장 등 영구시설물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3차례 원상복구 공문만 시행하였고,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시설물 철거 등의 추가 검토나 시행 없이 2023. 4. 20. 감사일 현재까지 원상복구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이 위·수탁 계약 협약조건을 위반에 대한 3차례의 원상복구 지시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위·수탁 계약에 대한 해지를 검토하지 않았고,

2023. 1. 1. ‘00000센터’, ‘00000’에 대한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기간이 끝난 이 사건 법인이 다시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수영장업 신고수리 처리의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체육시설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면 같은 법 제11조(시설 기준 등)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같은 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서’에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원상복구 공문시행 : '21. 9. 24. 1차, '21. 11. 5. 2차, '22. 1. 24. 3차 시행 후 '23. 4. 20. 감사일 현재까지 원상복구 명령하지 않음

‘시설 및 설비 개요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을 확인·검토하고 체육시설업 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00군 0000과는 체육시설업의 신고 장소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00군 0000과(당시 0000과)에서는 이 사건 법인이 2019. 6. 24.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을 하기 위해 신고한 경남 00군 00면 00리 000번지 ‘00000’ 수변공원 장소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확인으로 소유권이 00군에 있는 행정재산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신고인에게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받지 않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00군에서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민들과의 원활한 대민관계 유지를 위하여 강제적 수단 보다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었고 이 건과 관련하여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연찬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00군수는

① 공유재산의 원상이 무단으로 변경되어 관련 인허가 없이 사용·수익 되고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관리위탁 결정하였고, 무단으로 설치된 수영장에 대한 신고 수리를 해 주었으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연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00군에 대하여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고》 조치하오니, 처분 내용을 00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당한 기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기관경고)

② 무단으로 원상을 변경한 공유재산의 관리수탁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감독책임자 0000과장 지방00000 000(현 0000)과 실무책임자 지방0000 000(현 0000과)은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고, 실무담당자 지방0000 000(현 0000과)는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징계, 훈계)

③ 공유재산 무단 원상변경에 따른 원상복구를 지연 처리하고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는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감독책임자 0000과장 00000 000(현 0000과), 실무책임자 지방0000

000(현 00면), 실무책임자 0000과 지방0000 000(현 00면), 실무책임자 0000과 지방0000 000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감독책임자 0000과 지방00000 000(현 0000과), 감독책임자 0000과 지방00000 000, 실무담당자 지방0000 000(현 00면), 실무담당자 0000과 지방00000 000는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주의)

④ 체육시설업 신고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지방0000 000(현 000000)는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고, 감독책임자 0000과 지방00000 000(현 000000)는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주의)

⑤ 무단 원상 변경된 공유재산의 원상복구 완료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해당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경징계·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주의

제 목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조치 업무 부당처리

소 관 기 관 00군(0000과)

조 치 기 관 00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00군 0000과에서는 2021. 4. 28. ‘00면 00리 산00번지’ 일원의 무단 산림 훼손 및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사법처리를 위한 조사와 함께 복구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표 1] 민원접수 이후 주요 진행경과

일 자	주요 내용	비 고
2021. 4. 28.	○ 00면 00리 산00번지 일원에서 무단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	민원인→0000과
2021. 4. 28.	○ 불법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실황 조사 - 산지전용허가 없이 15,860㎡ 규모의 불법 형질변경 확인	0000과
2021. 7월 ~2022. 4월	○ 행위자 및 참고인 등 조사 진행	0000과
2022. 2. 7.	○ 산림불법훼손 적지복구 명령 이행 통보 - 복구비 예치 산출금액 : 11,460,500원	0000과→행위자
2022. 3. 18.	○ 복구설계서 승인 통보 - 복구면적 : 15,860㎡, 복구기간 : '22. 3. 21. ~ 5. 31.	0000과→행위자
2022. 4. 11.	○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사건송치(창원지방검찰청 00지청)	0000과
2022. 5. 27.	○ 복구설계서 변경승인 통보 - 복구기간 연장 : '22. 3. 21. ~ 11. 30.	0000과→행위자
2022. 10. 22.	○ 복구비 지급보증 보험기간 만료 - 보험금액 : 11,460,500원, 보험기간 : '22. 2. 22. ~ 10. 22.	

[출처 : 00군 0000과 제출자료 재구성]

2.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명령 업무 부당 처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복구를 명령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에 따르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 예치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복구비의 산정기준) 및 「2022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산림청 고시 제2022-3호, 2022. 1. 5.)」에 따라 경사도 10도 미만의 산지의 경우 1만㎡당 복구비는 72,261천 원을 적용하고 산지복구공사 감리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금액에 공사감리 비용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에 따르면 1만㎡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의 경우 감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OO군 OOOO과에서는 불법산지전용의 복구를 명령할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서 정한 적정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감리대상의 공사인 경우 감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OO군 OOOO과에서는 2022 2. 7. [표 2]와 같이 ‘산림불법훼손지 적지 복구 명령 이행 통보’를 하면서, 「2022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에서 정한 적정 복구비 예치금액 114,605천 원(72,261천 원×1.586ha)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인 11,460천 원으로 산정하였다.

[표 2] 산림불법훼손지 적지복구 명령 이행 통보 개요

명령일자	복구내용				복구비 예치 통지금액
	의무자	복구대상지	훼손내용	복구면적	
2022. 2. 7.	000 (00년생)	00면 00리 산00 외 2필지	형질변경 등	15,860㎡	11,460천 원 (적정 복구비 : 114,605천 원)

[출처 : 00군 0000과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00군 0000과에서는 복구면적이 15,860㎡임에 따라 복구공사의 감리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감리비용을 복구비에 포함시켜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나, 2022. 3. 18. 당해 복구공사의 복구설계서 승인 통보를 하면서 감리를 누락하였고 감리비용 또한 복구비에 추가로 예치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3. 불법산지전용지 복구공사 준공검사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그 행위를 한자에게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복구를 명령한 경우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42조(복구준공검사)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제2항 및 제55조(벌칙) 제10호에 따르면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고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00군 0000과에서는 불법산지전용의 복구를 명령한 경우, 복구명령을 받은 자가 복구공사 기간 내 복구를 이행하고 준공검사 신청을 받아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법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OO군 OOOO과에서는 2022. 3. 18. [표 3]과 같이 불법산지전용지 복구공사의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을 2022. 3. 21. ~ 11. 30.¹⁾로 승인하였음에도 복구기간 내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6개월이 경과한 2023. 5. 26. 감사일 현재까지 복구의무자가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있음에도 행정대집행 또는 고발 등 복구공사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3] 산림불법훼손지 적지복구 설계서 승인내역

승인일자	복구내용				복구기간
	복구의무자	복구대상지	훼손내용	복구면적	
2022. 3. 18.	OOO (OO년생)	OO면 OO리 산OO 외 2필지	형질변경 등	15,860㎡	'22. 3. 21. ~ 11. 30. (당초 : 3. 21. ~ 5. 31.)

[출처 : OO군 OOOO과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OO군 OOOO과에서는 산림훼손에 대한 대국민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건이 복잡, 치밀해지고 있으며 이에 사법처리도 전문교육 및 지식이 있고 복합적인 사건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및 인사검토 등 고려하겠으며, OO군 특별사법경찰의 담당신설 등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OO군수는

①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명령 업무 부당처리 및 준공검사 미이행 등 복구조치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OOOO과 지방OOOO OOO은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고, 실무책임자 OOOO과 지방OOOO OOO과 실무담당자 OOOO과 지방OOOO OOO(현 OO면)와 실무담당자 OOOO과 지방OOOOO OOO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고, 감독책임자 OOOO과 지방OOOOO OOO(현 OO면장)은 「경상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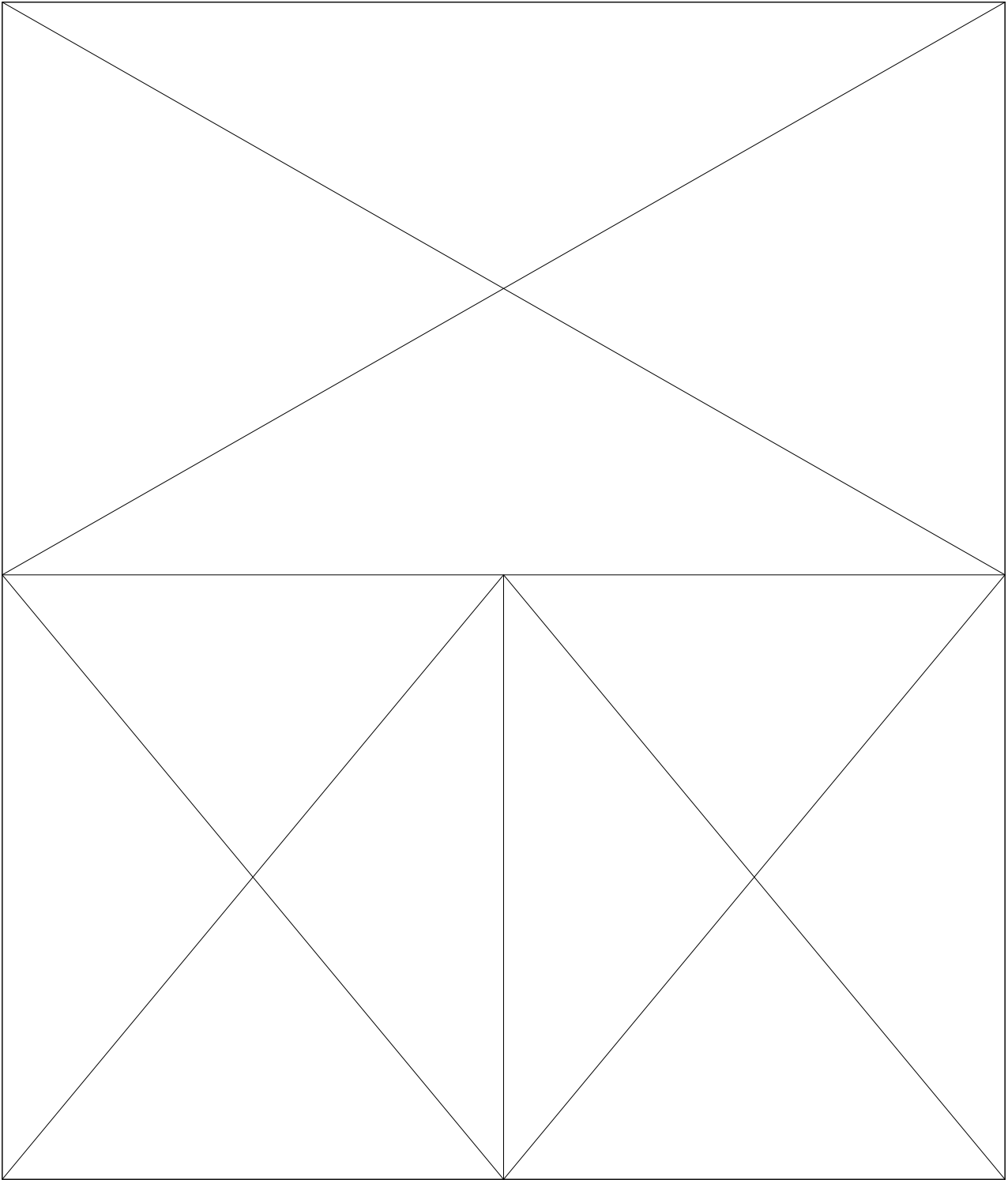
1) 당초 3. 21. ~ 5. 31. 기간으로 승인하였으나, '22. 5. 27.에 복구기간을 3. 21.~11. 30. 으로 변경 승인하였음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징계, 훈계, 주의)

②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 복구명령에도 복구의무자가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고발 등의 방법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관련 법령 준수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지] 불법산지전용지 현장 사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 요구 및 주의

제 목 부동산 교란행위 공익신고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00시(0000과)

조 치 기 관 00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00시 0000과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중개업,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이하 ‘부동산 교란행위’라고 한다) 분양대행사에 대한 공익 신고를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하고 [표 1]과 같이 공익신고를 처리하였다.

[표 1] 부동산 교란행위 관련 민원신고 및 업무처리 내용

연 번	일 자	관련사건 및 업무처리 내용	비고
1	'22. 10. 25.	○ 부동산 교란행위 피해 신고 - 부당이익 시세영향, 단체구성 중개제한, 특정중개사 중개제한 및 특정중개사 중개의뢰, 특정가격 중개 유도, 정당 표시·광고 방해, 불법중개행위 등 신고	민원인⇒한국부동산원
2	'22. 10. 27.	○ 부동산 교란행위 피해 신고 조치요청 -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 또는 경찰서에 고소, 고발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	한국부동산원⇒0000과
3	'22. 11. 7.	○ 한국부동산원 조치요청 관련 민원답변 - '00000'은 부동산건설팅이 아니라 분양홍보관으로 사업자등록 확인 - '0000아파트' 내 분양사무소는 적법한 계약에 따라 분양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판단 - '불법 공매로 소유권 취소소송 할 것' 내용의 게시물은 사인 간의 다툼에 의해 발생한 행위이며, 현수막은 모두 철거	0000과⇒민원인

4	'22. 11. 23.	○ 부동산 교란행위 민원 재신고 - 분양대행사가 'OOOO아파트'를 시세보다 10~20% 높게 분양할 목적으로 OOOO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민원인)의 중개의뢰를 제한하고자 현수막과 안내문을 아파트에 수일간 부착, 부동산 교란행위로 민원제기	민원인⇒OOOO과
5	'22. 12. 1.	○ 부동산 교란행위 민원답변 및 답변내용 -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 또는 경찰서에 고소, 고발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	OOOO과⇒민원인
6	'22. 12. 9.	○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및 담당 기관의 업무해태(적당 편의) 신고	민원인⇒OOOO담당
7	'22. 12. 23.	○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및 담당 기관의 업무해태(적당 편의) 신고 대한 민원답변 - 담당부서에서 시세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증거 자료 부족, 공인중개사법 위반 확인 불가 - 위반 사실 발견하지 못해 수사의뢰 하지 않음	OOOO담당⇒민원인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 행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공익신고)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에 따라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하고, 다만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OO시 OOOO과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방해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OO시 OOOO과에서는 2022. 10. 25. 신고된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하여,

신고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사 ‘OOOOO’가 시세 담합을 목적으로 신고자에게 실제 최저공매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안한 ‘공매분양 건적서’를 제출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라는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OOOO중개사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 OOO)를 대상으로 2022. 10. 14.경부터 아래 [표 2]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 등 게시물을 ‘OOOO아파트’ 각 세대 현관문, 외벽 등에 게시한 증거사진을 제출받아,

[표 2] 개업공인중개사 업무방해 게시물 내용

게시일자	현수막 등 게시물 내용	비고
'22. 10. 14.경	<p>알림사항 OOOO아파트 공매낙찰세대, 최근 위탁자 (주)OO이 보유한 OOOO아파트에 대해 OO부동산을 통해 공매낙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p> <p>(주)OO에서는 이런 OO부동산을 통한 공매낙찰이 불법적인 담합에 의한 낙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p> <p>은행의 지시를 받고 OO부동산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은 공매세대에 대해 불법적으로 현관비밀번호를 강제변경하여 (주)OO에 대한 동의 없이 주인것처럼 들락날락거리며 공매매수인을 모집 공매세대를 보여주며 공매낙찰을 유도해왔습니다.</p> <p>(주)OO은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아온 OO부동산을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며 이에 OO부동산을 통한 공매낙찰세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취소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분양대행사 ‘OOOOO’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²⁾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사인 간의 다툼에 의하여 발생한 행위로 간주하여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증명자료 등 보완 요구 없이 2022. 11. 7. 공익신고를 종결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OO시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실무책임자 및 실무담당자가 처음 접해보는 것으로

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의 개념에 관하여 제2조 제1호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개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매는 목적물의 강제환가라는 특징이 있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내용과 효과에서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알선하는 것은 목적물만 차이가 있을 뿐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매매를 알선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관련 법규가 아닌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실무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연찬 부족과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향후 관련자들에게 관련 법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OO시장은

①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OOOO과 지방OOOO OOO, 현재 실무책임자 OOOO과 지방 OOOO OOO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 요구 및 통보·주의

제 목 공작물 축조 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등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00시(00과)

조 치 기 관 00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00시 00과(이하 “시 00과”라 한다)에서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00시 00면 00리 000-00번지의 00 오토캠핑장 대표 000(이하 “건축주”라 한다)의 공작물 축조 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2. 공작물 축조 관련 개발행위허가 검토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서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등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에 제외한다.

그리고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항에 따르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항에서 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로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건축학회의 건축용어사전에 따르면 담장은 집의 둘레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흙, 돌, 벽돌 따위로 쌓아 올린 것, 주택의 둘레나 일정한 공간을 시각적, 보안적, 방범적 차원에서 둘러막기 위하여 구축한 자립형태의 차폐구조물, 부지의 경계선 등에 설치되고 부지를 구획하는 벽, 울타리와 달리 시계를 차단해서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범, 방화, 방음 등의 목적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에서도 「건축법」에 따른 담장으로 판단함에 있어 [별지]와 같이 반드시 재질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높이 2미터 이상의 담장은 안전을 위해 풍압 등을 고려하여 축조하는 것이 타당하며, 담장이 대지조성을 위한 담장으로 한정되지 않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설치된 담장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시 OO과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시 OO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22. 10. 31. 건축주의 오토캠핑장 가림막 설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담장으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해당 시설물을 담장 등의 공작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22. 11. 11. 건축주에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표 1] 개발행위 허가신청 내용

위치(신청인)	지적(㎡)	신청면적(㎡)	목적	용도지역	비고
OO면 OO리 000-00(OOO)	388	1.5	공작물 설치 (가림막)	계획관리지역	길이 20m 높이 2~5.9m

[출처 : OO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해당 공작물은 태풍, 강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수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캠핑장의 경계 부분에 대규모 공작물이 설치(계획상 길이 20미터, 높이 2~5.9미터)되는 것으로,

건축주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시 OO과에서는 오히려 담장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되어 안전상의 문제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3. 공작물 설치 관련 안전관리 미흡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제1항에서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재난 등으로

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OO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긴급점검 대상)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OO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따라서 시 OO과에서는 공작물의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 구조안전 및 내풍 설계 등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는 만큼,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더라도 해당 공작물이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점검이 필요하였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시 OO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판단한 실제 공작물이 안전 검토도 없이 2023. 1. 13. 현장확인 결과 [표 2]와 같이 설치되었음에도 「OO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른 긴급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2] 공작물 설치 현황

위치	구조	높이	길이	비고
OO면 OO리 000-00	경량철골구조	약 2~9.5m	약 30m	높이 : 계획 대비 61% 증가 길이 : 계획 대비 50% 증가

[출처 : OO시 제출자료 재구성]

시 OO과에서는 실제 공작물이 8미터 이상으로 설치되어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내풍설계 확인서까지 제출받아야 했으나,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캠핑장의

경계에 위치한 대규모 공작물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성 여부를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해당 캠핑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작물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시 OO과에서는 뒤늦게 건축주에게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등 알림’ 공문³⁾만 보내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OO시 OO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판례 및 타 시·군·구의 법령 적용 사례들을 다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OO시장은

- ①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실무책임자 OO과 지방OOOO OOO, 실무담당자 OO과 지방OOOOO OOO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캠핑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위치에 설치된 해당 공작물에 대해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3) 해당 시설물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설치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정기적인 사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을 통한 구조안전 확보 및 시설물 유지·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OO과-4356(2023.1.25.)]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및 주의

제 목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관련 민원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00시(00과)

조 치 기 관 00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00시 00과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옥외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00시 00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22. 10. 21.부터 2022. 10. 27.까지 안전신문고⁴⁾로 접수된 22건의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고 민원 답변을 회신하였다.

[표 1] 불법 광고물 신고 관련 민원 및 업무처리 내용

연 번	일 자	관련사건 및 업무처리 내용	비고
1	'22. 10. 21.	○ 민원인 : 불법 광고물 등 22건 안전신문고 신고 -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즉각 철거 후 강력한 과태료 처분 바라며 처리진행상황 통보 요청	15건
	'22. 10. 26.		6건
	'22. 10. 27.		1건

4) 안전신문고 :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

※ 신고경로 - 안전신문고 앱 (안드로이드, iOS), 안전신문고 포털 (www.safetyreport.go.kr)

2	'22. 10. 25.	○ 00시 00과 : 안전신문고 민원답변 - 불법광고물은 관련 법률을 검토한 후 현장에 도착하여 행정지도 후 해당 불법광고물을 철거	1차, 15건 답변
	'22. 10. 28.		2차, 7건 답변
3	'22. 10. 26.	○ 과태료 미처분에 대한 민원제기 2회 - 00시청의 불법현수막 근절 의지 여부 - 20여건의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전혀 안됨	국민신문고 민원
4	'22. 10. 28.	○ 과태료 미처분에 대한 민원답변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라 불법광고물 설치 주체가 명확한 해당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구두 및 서면상 행정지도 및 계도하여 즉시 자진철거 되었음	00시 00과
5	'22. 11. 25.	○ 민원인, 행정안전부 질의 후 민원 제기 -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과태료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되지 않음” - 과태료 부과여부, 금액, 향후 진행 사항 요청	국민신문고 민원
6	'22. 12. 29.	○ 과태료 부과요청에 대한 민원답변 - 00시 담당 부서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과태료 부과여부는 민원 발생 당시 담당자가 추후 재검토하여 결정할 것임을 알림	00시 0000담당관
7	'23. 1. 2.	○ 민원인, 감사팀 처리결과 알림 요청 - 담당자 징계 및 과태료 부과 여부, 부과 금액에 대해 민원인에게 알려주기를 요청	국민신문고 민원
8	'23. 1. 10.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 발송	00시 00과
9	'23. 1. 16.	○ 감사팀 처리결과 알림 요청에 대한 민원답변 - 담당부서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진행중 - 기존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흡에 대해 구두경고 및 법해석에 착오에 대하여 재차 경고	00시 0000담당관
10	'23. 1. 18.	○ 불법 광고물 임의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 확인 요구 ○ 안전신문고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과태료 상세 내역 요청	국민신문고 민원 2건
11	'23. 1. 25.	○ 행정안전부「옥외광고물법」관련 법령해석 요청 - 질의 : 다수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자에게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 회신 : 동일인이라도 장소별 수량을 기준으로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각각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적법함	00시 00과

12	'23. 1. 25.	○ 과태료 부과 금액 확인 요구에 대한 민원답변 - 위반사항에 대해 행위의 단일성을 인정, 추가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림 ○ 과태료 상제 내역 요청에 대한 민원답변 - 정보공개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될 수 없음을 알림	OO시 OO과
13	'23. 1. 10.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 발송 - 과태료 5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추가 과태료 고지	OO시 OO과

2. 불법현수막 신고 처리의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 등은 이를 위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별표 8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OO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 광고물 등을 설치한 자 등에 대

하여 철거 조치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각각의 설치 행위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OO시 OO과에서는 [표 2]와 같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2022. 10. 21.부터 2022. 10. 27.까지 22건(현수막 26장, 입간판 4개)의 불법 광고물 철거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한 신고를 받았음에도 행정지도와 자진철거 명령만 하고 94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표 2] '22. 10. 21.~10. 27. 안전신문고로 신고 된 OO시 관내 불법 광고물 현황

연 번	광고물 종류	광고물 면적	수량	위반차수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비고
	합 계				954만 원	A업체 : 824만 원 B업체 : 130만 원 A, B 업체 대표자 동일인
1	현수막	4.05㎡ (0.9m*4.5m)	26장	1차	650만 원 (25만 원*26장)	A업체
2	입간판	2.1㎡ (0.7m*3m)	3개	1차	174만 원 (58만 원*3개)	A업체
3		3㎡ (1.5m*2m)	1개	1차	130만 원 (130만 원*1개)	B업체

이후 신고자가 불법 광고물의 과태료 부과는 강행규정이라는 민원제기에 따라 재검토하여 2023. 1. 10.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각각의 설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지 않고 「옥외광고물법」 제20조 제1항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과태료 합계 금액이 824만 원인 A업체는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였으며, B업체는 동일 대표자라는 이유로 합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3. 정보공개청구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OO시 OO과에서는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최대한 공개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OO시는 불법 광고물을 신고한 민원인이 2023. 1. 1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자신이 신고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결과로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과태료 부과금액 및 회수금액 요구하는 민원에,

부분 공개에 대한 검토 없이 2023. 1. 3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개인정보 및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하는 답변을 회신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OO시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담당자 변경 시 업무매뉴얼 등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OO시장은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OO과 지방OOOOO 000(현 OOOO과), 현재 실무담당자 지방OOOO 000와 이들을 감독한 실무책임자 OO과 지방OOOO 000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7】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 요구 및 통보·주의

제 목 민원 발생한 불법 개발행위 등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OO군(OOOO과)

조 치 기 관 OO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OO군 OOOO과에서는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등 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서류 접수 및 행정정보공개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O군 OO면 OO리 OO번지 및 OO-1번지 농지의 개량행위에 대해 [표 1]과 같이 인근 과수원 소유자(경작자) 및 OO마을이장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표 1] 농지 개량행위 관련 민원발생 현황

농지소재지			농지 개량행위	민원 주요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행위자) : OOO ○개량행위 : 조성 완료된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2M 이상 절·성토 진행, 인접 토지에 피해 발생	○민원인 : OOO, OOO ○민원내용 : 절·성토행위 원상회복 요구 - 책임있는 설명 및 대비책 요구 - 관련 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처리
OO면 OO리	OO (답)	1,762		
	OO-1 (과수원)	4,268		

[출처 : OO군 제출자료 및 국민신문고 민원서류 재구성]

2.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지연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개량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4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규정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보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나, 2미터 이상의 절·성토 행위나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 OO군수는 공사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르면 농지개량 행위는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국토계획법」 제1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OO군 OOOO과에서는 민원이 발생한 농지개량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불법 개발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위반에 따른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OO군 OOOO과에서는 OO면 OO리 00번지, 00-1번지에 대해 [표 2]와 같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조치를 지연하였다.

[표 2] 주요 진행경과 및 업무처리 내용

일 자	주요내용	비고
2022. 3.28.	○ 해당 필지 불법행위 관련 붕괴위험 전화민원	
2022. 7. 3.	○ OO군수에게 바란다(OO저수지 주위 개발 원상복구)	
2022. 7.11.	⇒ 경작을 위한 절·성토 행위는 허가 대상 제외(옹벽 등 설치 의무 없음)	OOOO과
2022. 9. 6.	○ 1차 토사 유실 및 침하 발생 ⇒ OOOO과, 응급복구 명령	
2022. 9.21.	○ 응급복구 명령 및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통보	OOOO과
2023. 3.10.	○ 「국토계획법」 위반(불법 개발행위) 고발 ⇒ '23. 4. 27. 구약식	OOOO과
2023. 4.11.	○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OOOO과
2023. 4.26.	○ 원상회복 명령 통보('23. 6. 26.까지 원상회복)	OOOO과
2023. 5. 6.	○ 2차 토사 유실 및 침하 발생	

[출처 : OO군 제출자료 재구성]

① 개발행위 허가 대상 검토 부적정

2022. 3. 28. OO면 OO리 OO번지 및 OO-1번지의 농지개량행위와 관련하여 인근 동점마을 주민으로부터 전화민원이 발생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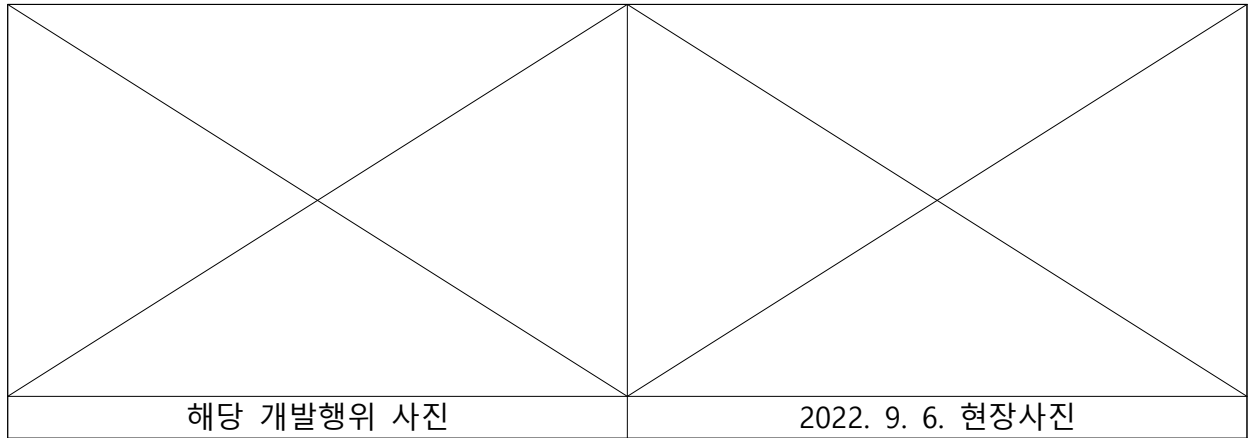
2022. 7. 3. ‘군수에게 바란다’에 개발업자가 산의 경사면을 절토, 정지, 성토 후 옹벽을 쌓지 않아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OO군 OOOO과에서는 당시 경작을 위한 절·성토 행위로 판단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옹벽 등의 설치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민원 답변을 하면서, 절·성토의 높이 및 인근 농지의 피해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

한편 2022. 9. 6. [그림 1]과 같이 해당 지번 및 인접 지번에 토사가 유실되고 지반 침하가 발생하여, 다음날 OOOO과에서 행위자에게 ‘응급복구 명령 통보’를 하였으며,

2022. 9. 21.에 해당 토지형질변경(성·절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뒤늦게 판단하여 ‘응급복구 명령 및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 통보’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 1] 2022년 불법개발행위 피해 관련 현장 사진



[출처 : OO군 제출자료 및 민원서류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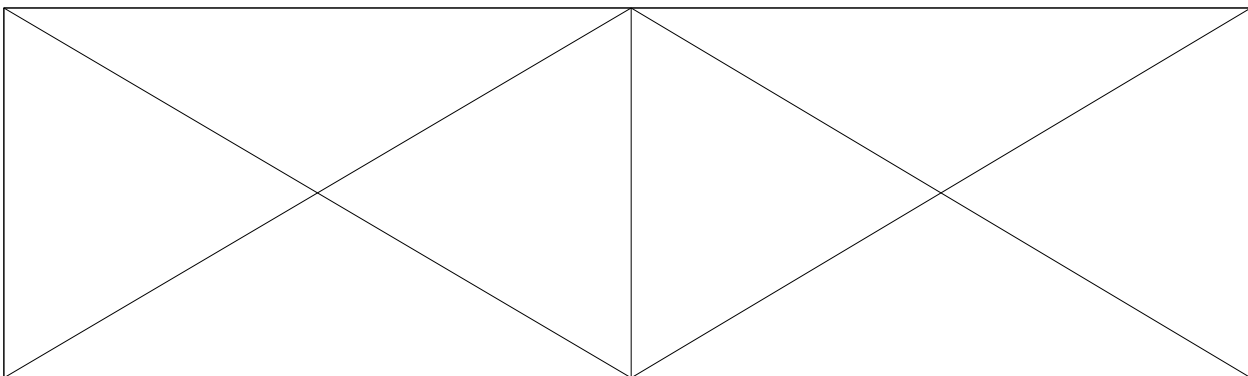
② 불법 개발행위 고발 및 원상회복명령 지연

OO군 OOOO과에서는 이미 2022. 9. 21. 해당 농지개발행위가 불법개발행위라고 판단하였음에도, 2023. 3. 10.이 되어서야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였다.

또한 2023. 4. 11.이 되어서야 「행정절차법」에 따라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였으며, 2023. 4. 26.에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였다.

한편 2023. 5. 6. 해당 지번과 인접한 산00번지(과수원) 경계 OO면에서 [그림 2]와 같이 추가 침하가 발생하였다.

[그림 2] 2023년 불법개발행위 피해 관련 현장 사진



[출처 : OO군 제출자료 및 민원서류 재구성]

3. 정보공개청구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에서 청구인이 비록 민원신청의 방식으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더라도, 그 신청 내용과 청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생년월일 등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형식적인 요건은 민원 서류 보완 등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OO군 OOOO과에서는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민원문서를 받았을 때,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로 처리하고 공개 여부 결정 및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OO군 OOOO과에서는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서류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OOOO과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청하라는 민원 답변만 반복하였다.

[표 3] 정보공개 요청 관련 민원처리 현황

일 자	주요내용	비고
2023. 3. 8.	○OO면 OO리 00-1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리 정보공개청구 민원	
2023. 3.16.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청 안내로 민원답변 처리	OOOO과
2023. 3. 9.	○OO면 OO리 일원 도로의 개발행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민원	
2023. 3.16.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청 안내로 민원답변 처리	OOOO과
2023. 3.16.	○OO면 OO리 0000-1 개발행위의 정보공개 요청 민원	
2023. 3.23.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청 안내로 민원답변 처리	OOOO과
2023. 3.16.	○OO면 OO리 00-1, 00번지 개발행위 민원처리 정보공개 요청	
2023. 3.23.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청 안내로 민원답변 처리	OOOO과

[출처 : OO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OO군 OOOO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현장 확인 시 관련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위반사항으로 판단 될 경우에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OO군수는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잘못 판단하고,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조치를 지연하여 처리한 실무책임자 OOOO과(현 길곡면) 지방OOOO 000, 실무책임자 OOOO과 지방OOOO 000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책임자 OOOO과 지방OOOOOO 000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주의)

②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및 주의

제 목 산림 무단벌채 고발사건 지연 처리

소 관 기 관 OO군(0000과)

조 치 기 관 OO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OO군 0000과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호 및 제6조 제5호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OO지청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받아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구 「형사소송법」(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개정시행) 제237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2018. 1. 30. 시행, 2021. 1. 1. 폐지, 법무부령 제917호) 제45조 제1항 및 제2항⁵⁾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2021. 1. 1. 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규칙 폐지 및 시행

- 폐지 규칙 :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 시행 규칙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따라서 OO군 OOOO과에서는 고발장을 접수한 경우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창원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OO군 OOOO과는 2020. 10. 5.에 성명 불상자가 OO군 OO면 OO리 산000-1에 있는 소나무 등 30그루의 입목을 무단벌채 하였다는 고발장을 ‘새울 행정시스템’으로 접수하고,

2020. 10. 12. “위법 사항이 확인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한 후 약 3개월이 지난 2021. 1. 13.경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하였으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자, 2021. 1. 22. OO지청 검사에게 수사지휘 건의하여 2021. 3. 15.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 OO지청에 송치하는 등 [표]와 같이 약 6개월에 걸쳐 고발사건을 처리하였다.

[표] 고발사건 처리경과

고발장 접수일	민원회신일	수사지휘 건의일자	송치일자	비고
2020. 10. 5.	2020. 10. 12.	2021. 1. 22. (3개월 이상 소요)	2021. 3. 15.	약 6개월 소요

관계기관 의견

OO군 OOOO과에서는 관련 규정 연찬 부족에서 발생한 일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교육하고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OO군수는

-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37조 등을 위반하여 민원으로 접수한 고발사건을 지연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OOOO과 지방OOOO 000(현 휴직), 실무책임자 OOOO과 지방OOOO 000(현 OO면

OOOOOO담당)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훈계 및 주의 요구

제 목 OO천 호안 정비공사 부적정

소 관 기 관 OO군(OO면사무소)

조 치 기 관 OO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OO군 OO면사무소에서는 [표 1]과 같이 2022. 5. 12.부터 2022. 6. 3.까지 28,471천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OO천 호안 정비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OO천 호안 정비공사 현황

사업명	계약일자	위치	사업량	사업비(천 원)			공사기간	시공회사	비고
				총사업비	도금액	관급자재대			
OO천 호안 정비공사	'22.5.12..	OO군 OO면 OO리 일원	전석쌓기 1식	28,471	20,883	7,588	'22. 5. 12 ~ '22. 6. 3..	(주)OO건설 OOO	

[출처 : OO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서 공사감독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그 밖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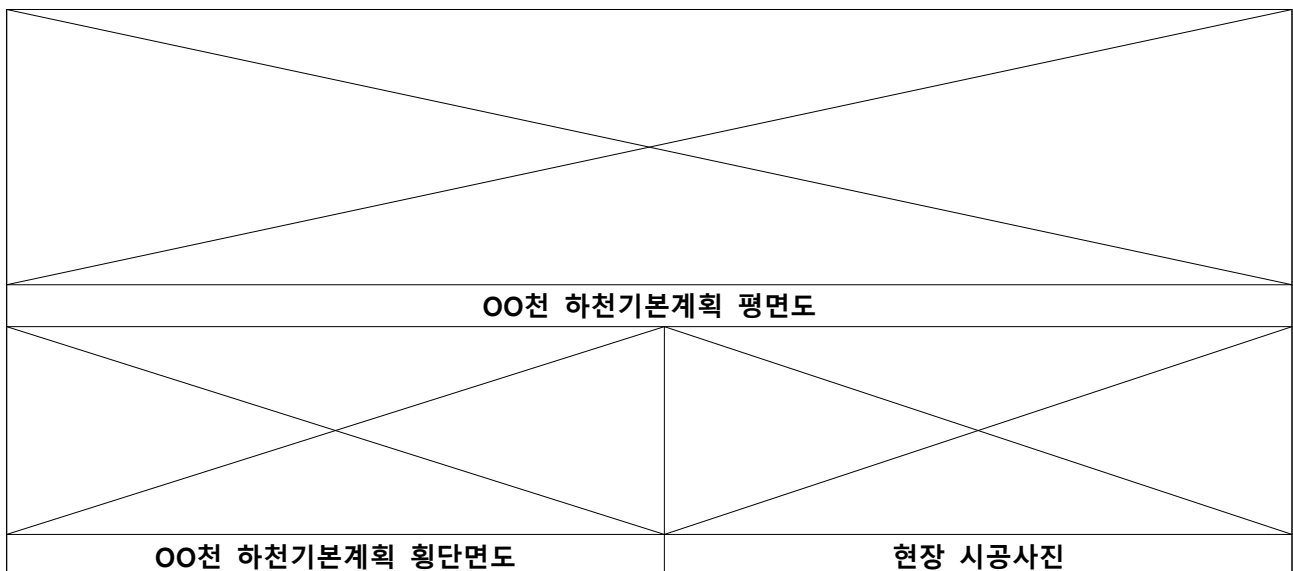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에서 발주청은 설계도서의 작성에 있어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인들이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을 해야 한다.

따라서 OO군 OO면사무소에서는 OO천 호안⁶⁾ 정비공사의 호안 사면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 시공은 홍수위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OO군 OO면사무소에서는 OO천 호안 정비공사 제방의 호안구조물을 설계에 반영하면서,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계획홍수위⁷⁾ 이상의 사면은 소류력⁸⁾에 따른 사면의 침식, 토립자의 유출 등의 우려가 없어 전석 대신 줄떼 등으로 사면을 관리할 수 있는데도, [그림 1]과 같이 독마루까지 전석을 일괄 설치함에 따라 [표 2]와 같이 공사비 약 3,338천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OO천 호안 정비공사 현황



[출처 : OO군 제출자료 재구성]

- 6) 호안 : 제방을 유수에 의한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경사면이나 밑부분 표면에 시공하는 공작물(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7) 계획홍수위 : 하천의 수위 중에서 몇 년에 한번씩 발생할 정도의 홍수 때의 수위를 홍수위라 하고, 배수 계획이나 치수 공사의 계획을 세울 때 기준이 된다.(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 8) 소류력(掃流力) : 토사 입자를 이동 가능하게 하는 직접적인 물 흐름의 힘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OO군은 공사를 계획하고 추진한 실무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어 주의를 당부하겠으며,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OO군수는

- ① OO천 호안 정비공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책임자 OO군 OO면 지방OOOO 000(현 OO군 OO면)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및 주의

제 목 고충민원 등 처리기한 미준수

소 관 기 관 00시(00과, 0000과)

조 치 기 관 00시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00시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청된 민원을 민원과에서 분류·접수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면 담당부서에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민원처리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 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및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등 최대 28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의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한편 OO시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2,331건의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처리⁹⁾하였다.

따라서 OO시에서는 각종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하되, 그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등 민원처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OO시 OO과, OOOO과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면서 [표]와 같이 총 2건의 민원을 「민원처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9) 부서별로는 OOOO과 9,681건, OOOO과 2,926건, OO과 1,981건, OO과 1,260건, OO과 1,012건 등 상위 5개 부서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76%를 차지하고 있음

처리기한을 넘겨 10일 이상 지연 처리하는 등 민원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고충민원 지연처리 현황

부서명	민원번호	접수일자	처리기한	처리일자	비고(지연일)
OO과	1AA-0000-00000000	2020.8.11.	2020.8.21.	2020.9.2.	12일
OOOO과	1AA-0000-00000000	2022.2.25.	2022.3.8.	2022.3.30	22일

[출처 : OO시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OO시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민원처리부서 및 국민신문고 시스템 담당의 민원처리 진행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이번 사례를 업무연찬 등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민원처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OO시장은

- ①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민원처리 기한을 넘겨 지연처리하는 등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OO시 OO과 지방OOOO OOO(현 OOOO과), 실무담당자 OOOO과 지방OOOOO OOO(현 OOOO과)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지시 바랍니다.(주의)
-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및 주의

제 목 고충민원 등 처리기한 미준수
소 관 기 관 OO군(OOOO과, OOOO과, OOOO과)
조 치 기 관 OO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OO군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청된 민원을 민원과에서 분류·접수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면 담당부서에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민원처리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 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및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등 최대 28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의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한편 OO군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213건의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처리¹⁰⁾하였다.

따라서 OO군에서는 각종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하되, 그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등 민원처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OO군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면서 [표]와 같이 총 4건의 민원을 「민원처리법」에서 정하

10) 부서별로는 OOOO과 524건, 주민행복과 335건, OOOO과 199건, OOO과 194건 등 상위 4개 부서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고 있는 처리기한을 10일 이상 넘겨 지연 처리하는 등 민원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고충민원 지연처리 현황

부서명	민원번호	신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자	비고
OOOO과	00000	2020.3.6.	2020.3.16.	2022.1.20.	676일
OOOO과	00000	2020.3.13.	2020.3.23.	2022.1.20.	668일
OOOO과	00000	2022.12.20.	2022.12.28.	2023.3.27.	89일
OOOO과	00000	2022.8.9.	2022.8.18.	2022.9.28.	41일

[출처 : OO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OO군에서는 민원처리 업무 관련하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소송중인 사항, 시스템 업무 소홀, 부서 지정 등의 사유로 지연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민원들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서류의 이송, 민원처리 기간 연장, 중간회신 등을 통해 민원 처리가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최소 41일에서 최대 676일을 지연 처리한 것으로 이 같은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OO군수는

①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민원처리 기한을 넘겨 지연처리하는 등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OOOO과 지방OOOOOO OOO(현 휴직), 지방OOOOOO OOO(현 OOOO과), 지방OOOOO OOO(현 OO면), 실무담당자 OOOO과 지방OOOOO OOO, 실무담당자 OOOO과 지방OOOO보 OOO(현 지방OOOO, OO면)은 「경상남도 행정

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지시 바랍니다.(주의)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및 주의

제 목 고충민원 등 처리기한 미준수

소 관 기 관 OO군(OOOO과, OO과, OO과, OO읍, OO면, OO면)

조 치 기 관 OO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OO군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청된 민원을 OOOO과에서 분류·접수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면 담당부서에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민원처리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27조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또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 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및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등 최대 28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 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의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한편 OO군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13건의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처리¹¹⁾하였다.

따라서 OO군에서는 각종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하되, 그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등 민원처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11) 국민신문고 839건, 새울 474건으로 국민신문고의 경우 0000과 199건, 0000관 130건, 0000과 94건 등 상위 3개 부서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50%이고, 새울의 경우 0000과 204건, 0000관 47건 등 상위 2개 부서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타 시군에 비해 0000관의 민원조사 처리 비중이 전체 민원의 14%로 높은 편에 속하고, 0000과는 국민신문고에서는 54건으로 6%에 불과하나 새울은 204건으로 43%를 처리하고 있음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OO군 OO읍 등 7개 부서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면서 [표]와 같이 총 10건의 민원을 「민원처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한을 10일 이상 넘겨 지연 처리하는 등 민원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민원 지연처리 현황

부서명	민원번호	접수일자	처리기한	처리일자	비고(지연일)
OO읍	1AA-0000-000000	2020.7.29	2020.8.18.	2020.11.9.	62일
OO면	1AA-0000-000000	2021.10.6.	2021-10.15.	2022.2.9.	80일
OOOO과 (OO과)	1AA-0000-000000	2021.10.18.	2021.10.26.	2021.11.15.	14일
OO면	1AA-0000-000000	2021.11.18.	2021.11.26.	2022.2.10.	51일
OO면	1AA-0000-000000	2022.1.5.	2022.1.13.	2022.2.10.	17일
OO과	1AA-0000-000000	2022.7.18.	2022.7.26.	2022.8.11.	12일
OO과	1AA-0000-000000	2022.7.29.	2022.8.8.	2022.8.30.	15일
OOOO과 (OO과)	1AA-0000-000000	2022.12.7	2022.12.15.	2022.12.29.	10일

[출처 : OO군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OO과에서는 체육공원 고양이집 설치 관련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기한이 지난 2022. 12. 16.이 되어서야 OOOO과에 부서 재지정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민원은 OOOO과를 거쳐 OOOO과에서 최종 답변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OO군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사례를 전파하고,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OO군수는

①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민원처리 기한을 넘겨 지연처리하는 등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00군 00읍 지방00000 000(현 0000과), 실무담당자 00면 지방00000 000(현 지방0000, 00면), 실무담당자 0000과 지방0000 000, 실무담당자 00면 지방00000 000(현 지방0000, 0000과), 실무담당자 0000과 지방00000 000, 실무담당자 00과 지방0000 000, 실무담당자 00과 지방00000 000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지시 바랍니다.(주의)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주의 요구 및 주의

제 목 고충민원 등 처리기한 미준수

소 관 기 관 OO군(OOOO과 외4)

조 치 기 관 OO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OO군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청된 고충민원을 민원과에서 분류·접수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면 담당부서에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민원처리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한편,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 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및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등 최대 28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

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의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한편 OO군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신문고로 총 5,104건¹⁾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였다.

따라서 OO군에서는 각종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하되, 그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등 민원처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OO군 행정과, OOOO과 등 5개 부서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표]와 같이 총 8건의 고충민원을 「민원처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한을 넘겨 지연²⁾ 처리하는 등 민원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1) 2020년 1,276건, 2021년 1,696건, 2022년 2,132건

2) 2020년~2022년 국민신문고 처리민원 중 10일 이상 지연처리된 민원

[표] 고충민원 지연처리 현황

부서명	민원번호	접수일자	처리기한	실제 처리일자	비고
행정과	1AA-0000-000000	2020. 8. 21.	2020. 8. 31.	2020.10.28.	37일 *시스템184일 지연
OOOO과	1AA-0000-000000	2021. 2. 26.	2021. 3. 9.	2021. 5. 10.	43일
OOOO과	1AA-0000-000000	2021. 4. 20.	2021. 4. 28.	2021. 6. 9.	28일
OOOO과	1AA-0000-000000	2021. 6. 1.	2021. 6. 29.	2021. 7. 27.	34일
OOO과	1AA-0000-000000	2021. 2. 4.	2021. 2. 16.	2021. 4. 16.	42일
OOO과	1AA-0000-000000	2021. 3. 8.	2021. 3. 16.	2021. 4. 16.	23일
OOO	1AA-0000-000000	2021. 3. 17.	2021. 3. 25.	2021. 5. 18.	37일
OOOO 사업소	1AA-0000-000000	2021. 1. 7.	2021. 1. 15.	2021. 2. 3.	13일

[출처 : OO군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민원처리 업무담당자의 인사발령 등에 따라 미 처리된 민원이 인수인계 되지 않아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와 온나라 시스템으로 민원처리 답변의 검토가 완료되었음에도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연계 처리하지 않아 민원 답변이 지연된 경우 등이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OO군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을 통해 법규 숙지 및 업무연찬을 지원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OO군수는

① OO군수는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민원처리 기한을 넘겨 지연처리하는 등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OO과 지방OOOOO OOO(현 OO과), 실무담당자 OOOO과 지방OOOO OOO, 실

무담당자 0000과 지방00000 000(현 00000과), 실무담당자 000과 지방 00000 000(현 0000과 0000담당), 실무담당자 000 지방0000 000(현 00면), 실무담당자 0000사업소 지방0000 000(현 00읍)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또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의)